

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
보도일시	2021. 8. 10.(화) 10:00	배포일시	2021. 8. 10.(화) 08:00
담당과장	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장 박철건 (044-215-5740)	담당자	김영웅 사무관 ssuper84@korea.kr 김선영 사무관 ksunny3@korea.kr
	세제실 조세분석과장 최영진 (044-215-4120)		정지운 사무관 jiun.chung@korea.kr
	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김위정 (044-215-7310)		이상희 사무관 leet88@korea.kr
	국고국 국채과 김이한 (044-215-5130)		최시훈 사무관 choisihoon@korea.kr
	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장 이명선 (044-215-5150)		이승민 사무관 sseung513@korea.kr
	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장 김환수 (044-215-5330)		한재수 사무관 han142857@korea.kr
	재정혁신국 참여예산과장 권기중 (044-215-5480)		김소연 사무관 yeoni2266@korea.kr
	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추진단 재정데이터제도팀장 김동학 (044-330-1310)		정소영 사무관 syjeong0214@korea.kr

「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」 2021년 8월호 ('21.6월말 기준)

- ◇ **적극적 재정운용으로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, 세수 호조세로 인한 재정수지 개선 흐름이 상반기 지속 (전년동기대비 +42.8조원)**

* 성장률 제고, 소득분배개선, 세수증가 등 확장재정의 1석3조 효과 지속

- ◇ **코로나 피해 계층 지원, 고용회복·일자리 창출, 신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관련 사업 등 적극 집행**

* 4개월(3~6월) 연속 취업자수·고용률 상승, 소부장 중소·중견기업 성장 가속화, 친환경차 비중 큰폭 증가('16.上1.1→'21.上 4.0% 4배↑) 등에 기여

- 기획재정부는 「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」 8월호를 발간하여 '21년 상반기 기준의 재정운용 동향 및 주요 재정사업 성과 등 발표

-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

- 상반기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'21년 본예산 및 1차 추경예산을 신속·적극적으로 집행*한 결과

* 집행관리 대상사업 기준 역대 최고수준 집행(68.2%), 1차추경 현금지원사업의 실제지원 대상규모(377만명)의 대부분(99.9%) 지급 완료

- 소상공인, 고용취약계층 등의 피해 경감, 고용지표 및 소득 분배상황 개선 등 민생회복에 기여하면서,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를 뒷받침하였고,

- 세수호조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개선흐름이 지속*되어,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가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축소('20년△90 → '21년 △47.2조원)되는 등 재정운용의 선순환이 공고화되고 있다고 평가

* 상반기 통합수지 개선폭(전년대비, 조원) : (1~6월 누적) +42.8 (1월) +3.1 (2월) +10.4 (3월) +1.6 (4월) +11.8 (5월) +13.8 (6월) +2.0

- 다만, 최근 코로나 재확산세로 소상공인의 추가 피해 및 고용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만큼,

- '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' 등 2차 추경 사업을 적기에 차질 없이 집행하는 등 하반기에도 재정이 민생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힘

- 아울러, 위기 이후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, 탄소중립 등 구조적 변화에도 적극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

- 특히,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사회 구현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 확대 및 재정혁신*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,

* '탄소중립 및 기후환경에 대응한 주요국의 재정동향 및 시사점'(KDI 기고문) 참고

- 우리도 친환경차·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탄소저감 재정투자를 지속하고,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혁신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음

- 한편, 8월호의 주요재정 이슈로는,

- ① Post 코로나 시대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원격교육 발전방향
- ② 탄소중립 및 기후환경에 대응한 주요국의 재정동향 및 시사점
- ③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R&D 관련 전략 및 시사점
- ④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주요내용
- ⑤ 「국민공감예산」 편성을 위한 대국민 소통 강화 방안
- ⑥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집행 개선방안
- ⑦ 차세대 디브레인, 데이터 기반 행정과 AI정부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난다 등 외부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기고문을 게재하였음

【'21.6월(누계기준) 재정운용동향】

◇ (총수입) 국세수입(181.7조원) 등 298.6조원 (전년대비 +72.6조원*)

* (국세)+48.8 (세외수입)+3.2 (기금수입)+20.5조원

- 빠른 경기회복, 자산시장 호조, 세정지원 기저효과 및 우발세수로 인해 국세수입 증가* 등 총수입 개선흐름 지속

* 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(+13.3조원) 제외 시 전년대비 +35.5조원 증가 수준

- 다만,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하반기 세입여건 불확실성 확대

◇ (총지출) 상반기 345.8조원 집행 (전년대비 +29.8조원)

- 소상공인 피해지원, 고용유지 등 사회안전망 강화, 코로나 방역대응 등을 중심으로 한 조기집행 결과, 진도율 개선

◇ (재정수지) 통합재정수지 △47.2조원 (전년대비 +42.8조원)

- 빠른 세수회복세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재정운용의 선순환 공고화

* 상반기 통합수지 개선폭(전년대비, 조원) : (1~6월 누적) +42.8
(1월) +3.1 (2월) +10.4 (3월) +1.6 (4월) +11.8 (5월) +13.8 (6월) +2.0

- (총수입, 298.6조원) 국세, 세외수입 등 전반적 개선세가 유지되고 있으나, 코로나 재확산으로 하반기 세입여건의 불확실성 확대

- ① (국세, 181.7조원) 코로나 4차 확산 이전으로 ①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, ②자산시장 호조, ③기저효과·우발세수 등에 따라 전년대비 진도율 17.7%p(2차 추경 기준 11.2%p) 증가(+48.8조원)

※ 세정지원 기저효과 +13.3조원 제외시 실질적 증가수준은 +35.5조원
- 이월납부: 작년 납부의무세액이 납부유예 조치로 금년으로 이월되어 납부
- 납부유예: 작년 1~6월 납부의무세액이 작년 하반기(7~12월)로 유예되어 비교대상인 작년 1~6월 납부세액 감소

- (①경기회복)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로 인해 법인세(+10.4조원), 부가가치세(+5.1조원) 등이 전년대비 +20조원 증가

*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(조원 개월기준) : ('19) 56.3 → ('20) 67.5 <+19.8%>
소매판매액지수(전년동월비, %) : ('21.1)0 (2)8.2 (3)11.1 (4)8.7 (5)3.1

- (②자산시장 호조) 부동산·주식시장 등 호조로 양도소득세(+7.3조원), 증권거래세(+2.2조원)·농특세(+2.1조원) 등이 전년대비 +13조원 증가

* 주택매매거래량(만호): ('19.11~'20.5월) 69.3 → ('20.11~'21.5월) 72.7 <+5.0%>
증권거래대금(조원): ('19.12~'20.5월) 1,911 → ('20.12~'21.5월) 3,811 <+99%>

- (③기저효과·우발세수) 작년 코로나 세정지원 기저효과(+13.3조원), 상속세 등 우발세수(+2조원)로 전년대비 +16조원 증가

- ② (세외수입, 16.4조원) 한은잉여금(+1.4조원, 2월 세입조치), 담합기업 과징금 및 '20년 부담금 유예에 따른 기저효과 등 부담금 증가(+1.2조원)로 전년대비 진도율 7.1%p 증가(+3.2조원)

* 공정위 담합기업 과징금 및 경찰청·법무부 벌금·과료 등(0.7조원), '20년 정유업계 석유수입·판매 부과금 및 항공업계 과징금 유예로 인한 기저효과(0.4조원)

- ③ (기금수입, 100.4조원)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사회보장성기금 자산운용 수익 등 수입증가(+16.2조원)로 전년대비 진도율 10.7%p 증가(+20.5조원)

(조원, % , %p)	'20년						'21년(잠정)			전년동기 대비			
	추경 (A)	결산 (B)	6월 (C)	6월 (누계) (D)	추경 (E=D/A) 진도율 (F=D/B)	결산 (F=D/B)	1차 추경 (G)	6월 (H)	6월 (누계) (I=G)	진도율 (J=I/G)	6월 (H-C) (H-C)	누계 (I-D) (I-D)	진도율 (J-E) (J-E)
□ 총수입	470.7	478.8	27.8	226.0	48.0	47.2	483.0	37.2	298.6	61.8	9.4	72.6	13.8
◇ 국세수입	279.7	285.5	14.7	132.9	47.5	46.6	282.7	20.0	181.7	64.3	5.2	48.8	16.7
○ 일반회계	271.9	276.3	14.1	129.6	47.7	46.9	274.0	19.2	175.8	64.2	5.1	46.3	16.5
- 소득세	88.5	93.1	4.2	40.9	46.2	43.9	89.8	8.6	60.3	67.1	4.4	19.4	20.9
- 법인세	58.5	55.5	3.1	29.3	50.0	52.7	53.3	1.8	39.7	74.4	△1.4	10.4	24.4
- 부가가치세	64.6	64.9	1.8	31.0	48.0	47.8	66.7	2.6	36.1	54.2	0.8	5.1	6.2
- 교통세	15.5	13.9	1.4	6.3	40.5	44.9	15.7	1.3	9.0	57.1	△0.0	2.7	16.6
- 관세	7.7	7.1	0.4	3.5	45.6	49.8	8.3	0.7	3.9	46.3	0.3	0.3	0.7
- 기타	37.2	41.8	3.1	18.7	50.3	44.8	40.2	4.1	26.9	67.0	1.0	8.2	16.7
○ 특별회계	7.8	9.3	0.6	3.4	42.9	36.3	8.7	0.8	5.9	67.7	0.2	2.5	24.8
◇ 세외수입	29.1	26.9	0.8	13.1	45.2	48.8	29.3	1.8	16.4	56.0	1.0	3.2	10.8
◇ 기금수입	161.9	166.2	12.3	79.9	49.3	48.0	171.0	15.4	100.4	58.7	3.1	20.5	9.4
(사보기금)	95.8	100.0	9.0	49.5	51.7	49.5	99.5	9.9	65.6	66.0	0.9	16.2	14.3

* 6월은 2차 추경 통과 이전으로 진도율을 1차 추경 기준으로 표시

- **(총지출, 345.8조원)** ①코로나 피해계층(소상공인, 실업자 등) 지원, ②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, ③코로나 방역대응 등에 역점을 둔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3.4%p 증가(+29.8조원)

① 1차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⁺(+4.8조원)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(+0.4조원), 실업자의 생계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구직급여(+1.0조원) 등 코로나 피해 계층의 생계안정 지원 확대

② 금년부터 기초연금⁺(+2.8조원), 생계급여^{**}(+0.7조원) 및 주거급여^{***}(+0.4조원) 대상 확대 등 저소득층 소득·주거안정 지원 강화

* 지급액 인상(25→30만원)을 전체 수급자로 확대 ** 노인·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
***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에게도 주거급여 지원

③ 감염병 대응지원체계 구축·운영(+1.0조원), 코로나 백신 임상지원(R&D, +0.1조원) 등 코로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확대

(조원, %, %p)	'20년				'21년(잠정)				전년동기대비		
	추경(A)	결산(B)	6월(당월 C)	6월(누계 D)	추경(E=D/A)	결산(F=D/B)	1차 추경(G)	6월(당월 H)	6월(누계 I)	진도율(J=I/G)	증감(K=J-I)
◇ 총지출	554.7	549.9	56.5	316.0	57.0	57.5	572.9	63.9	345.8	60.4	7.4
○ 예산	377.5	374.4	39.9	228.7	60.6	61.1	382.3	45.5	238.5	62.4	5.5
- 일반회계	323.5	320.8	31.9	193.9	59.9	60.4	321.6	37.3	197.6	61.5	5.4
- 특별회계	54.0	53.6	8.0	34.8	64.4	64.9	60.8	8.1	40.9	67.2	0.1
○ 기금	177.3	175.2	16.5	87.2	49.2	49.8	190.6	18.5	105.0	55.1	1.9
(사회보장성기금)	61.2	59.1	5.1	28.9	47.3	48.9	62.9	5.4	33.1	52.6	0.3
○ 세입세출외**	-	0.4	0.0	0.1	-	30.1	-	-	2.3	-	△0.0

* 6월은 2차 추경 통과 이전으로 진도율을 1차 추경 기준으로 표시 **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

※ (참고) 집행관리대상사업 집행률

- 6월까지 집행률은 역대최고 수준인 68.2%(234.2조원, 전년대비 +1.7%p)로, -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·SOC·생활SOC 및 한국판 뉴딜 등 모든 분야에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초과 달성

(단위 : 조원, %)	규모	6월 집행(A)	(%)	조기집행 목표(B)	(%)	진행률(A/B)
일자리	13.6	10.2	75.3	9.1	67.0	112.0
SOC	54.2	37.9	69.9	33.6	62.0	112.8
생활SOC	11.0	7.6	69.5	7.2	65.5	105.6
한국판 뉴딜	22.5	15.8	70.4	15.7	70.0	100.6

- **(재정수지)** 총수입 개선호름 지속으로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크게 감소 ('20.6월 누계 △90.0 → '21.6월 누계 △47.2조원, +42.8조원)

(조원, %, %p)	'20년				'21년(잠정)				전년동기대비		
	추경(A)	결산(B)	6월(당월 C)	6월(누계 D)	추경(E=D/A)	결산(F=D/B)	1차 추경(G)	6월(당월 H)	6월(누계 I)	진도율(J=I/G)	증감(K=J-I)
◇ 총수입(a)	470.7	478.8	27.8	226.0	48.0	47.2	483.0	37.2	298.6	61.8	9.4
◇ 총지출(b)	554.7	549.9	56.5	316.0	57.0	57.5	572.9	63.9	345.8	60.4	7.4
◇ 통합재정수지(c=a-b)	△84.0	△71.2	△28.7	△90.0			△89.9	△26.7	△47.2		2.0
◇ 사회보장성기금수지(d)	34.6	40.8	3.9	20.5			36.5	4.5	32.5		0.6
◇ 관리재정수지(e=c-d)	△118.6	△112.0	△32.6	△110.5			△126.4	△31.2	△79.7		1.3

- **(국가채무)** 1~6월 국고채 발행액은 106.0조원으로, 발행 진도율이 전년대비 큰 폭 증가(50.6→56.9%)하며 조기집행 등을 안정적으로 뒷받침

* 6월 국가채무 잔액 : 898.1조원(국고채 804.3, 주채채 80.8, 외평채 9.8 등)

(※ 국회가 3월 의결한 추경예산 기준 '21년 국가채무 전망치 : 938.4조원)

** 1~6월 조달금리는 1.68%로 과거 평균('16~'20년: 1.84%) 대비 낮은 수준

- 외국인·보험사·연기금 등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, 특히, 외국인은 우리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탈,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1~6월 중 역대 최고 수준인 21.1조원 규모 국고채 순투자

* 1~6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(조원) : ('18)+10.1 ('19)+6.4 ('20)+15.1 ('21)+21.1

** 국고채 상장잔액 중 외국인 비중은 '21.6월 기준 17.7%로 지속 증가중

↳ ('18말)15.2% ('19말)16.0% ('20말)16.7%

【주요 재정사업 및 성과('21.6월 누계기준)】

- ◇ 물가안정을 위한 농수산물·원자재 수급조절, 고용안정 및 코로나 피해지원,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정부지원 역점
- ◇ 신산업 및 소부장 산업 육성, 저탄소 에너지 전환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정부지원 지속
-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 감소, 상반기 벤처투자 최대 실적, 친환경차 보급률 증가, 고용지표 4개월 연속 증가 등 성과 가시화

□ 물가안정 및 수급조절 지원

- (농축수산물) 농축산물 공급 부족 보완을 위해 수매·수입* 등 비축(0.2조원), 정부양곡 상반기 집중 공급**

* 계란 수입(만개) : (1~3월)6,400 (4월)4,000 (5월)4,000 (6월)8,000 (월 평균 3,730만개)
7~9월 3억개 수입 추진

** 1~6월 중 정부양곡 29만 톤 공급(올해 전체 공급예정 물량(37만 톤)의 78.4% 수준

- (원자재) 재난·환율변동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자재 구입 자금 지원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(0.1조원)

□ 고용안전망 강화 및 코로나 피해지원

- (고용) 취업서비스(취업알선, 교육 등)·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(0.4조원), 구직급여(6.5조원), 고용유지지원금(0.8조원) 등 적극 집행으로 고용취약계층의 취업·생활안정 지원

- (코로나피해지원) 소상공인 버팀목자금*(4.8조원), 특고·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(0.4조원),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(0.1조원) 등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 최소화 지원

※ 취업자수 및 고용률 모두 4개월 연속 상승 등 주요 고용지표 개선세

* 취업자 증감(만명, 전년비) : ('21.1) △98.2 (2) △47.3 (3) 31.4 (4) 65.2 (5) 61.9 (6) 58.2

* 고용률 증감(%p, 전년비) : ('21.1) △2.6 (2) △1.4 (3) 0.3 (4) 1.0 (5) 1.0 (6) 0.9

□ 저소득층 생계안정 및 교육·주거·돌봄 안전망 강화

- (생계안정) 노인·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한 생계급여(3.3조원) 대상 확대, 기초연금 확대 지급(10.3조원) 등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 경감 지원

- (교육)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국가장학금(2.7조원), 고교무상교육(0.8조원), 교육급여(805억원) 등 교육비 부담 경감

- (주거)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 등 주거급여(1.5조원) 지원, 공공(0.2조원)·민간임대(0.9조원) 주택융자 지원 등

- (돌봄) 만3~5세 공통과정 교육비·보육료(2.9조원), 가정양육 수당(0.5조원),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(0.3조원) 등 아동·노인에 대한 돌봄 안전망 중점 지원

※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·거동불편 등 취약노인(50만명 추산)의 92%(46만명)가 상반기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(자료: 복지부)

□ 신산업 육성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

- 시스템반도체,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, 국내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, 유망산업 벤처투자 촉진 지원

- (신산업 육성) 한국형 뉴딜펀드 및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 출자(0.7조원),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(0.1조원), 바이오 의료기술개발(0.3조원) 등 지원

※ 상반기 K-뉴딜, 신산업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(자료: 산자부)

* ① K-뉴딜 : ('20.上) 14.9억불 → ('21.上) 39.4억불(163.4% ↑)

* ② 신산업 : ('20.上) 38.1억불 → ('21.上) 52.5억불(37.8% ↑)

- (소부장 지원) 소부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*(1.3조원) 및 기반구축(0.2조원) 등 기술개발·사업화 지원

*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(0.1조원), 소재부품기술개발(0.9조원),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(0.1조원) 등

※ 소부장 산업 대일(對日)의존도 감소,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성장 가속화(자료: 산자부)

* 불화수소 대일수입액(1~5월) : ('19년) 28.4백만달러 → ('21년) 4.6백만달러 (△83.6%)

* 100대 품목 대일의존도 : ('19.1~5월) 31.4% → ('21.1~5월) 24.9%

* 소부장 상장기업 매출액 증가율('19.1분기→'21.1분기) : 20.1% (상장기업 전체평균 12.7%)

- (벤처투자)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(0.8조원), 창업사업화*(0.4조원) 등 유망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민간투자 촉진 지원

* 예비, 초기, 도약기 등 창업 전주기 사업화 자금 및 교육·멘토링 제공

- (예비창업패키지) 1,530개사 (초기창업패키지) 900개사 (창업도약패키지) 680개사 등 지원

※ '21년 상반기 벤처투자자와 벤처펀드 결성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 기록 (자료: 중기부)

* 벤처투자(조원) : ('19.上)2.0 ('20.上)1.7 ('21.上)3.1(+1.4조원, 전년동기대비 85.6% ↑)

* 벤처펀드결성(조원) : ('19.上)1.4 ('20.上)1.2 ('21.上)2.7(+1.5조원, 전년동기대비 130.7% ↑)

□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

- 脫 탄소사회로의 조기이행을 위한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,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,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적극 지원
- (친환경차 보급) 전기자동차 보급·충전인프라 구축(0.7조원),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(0.3조원) 등 적극 집행
- (그린리모델링) 공공건축물(0.2조원) 및 노후 임대주택(0.3조원)의 에너지 성능,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지원
- (온실가스저감) 노후경유차 폐차, 저감장치 등을 지원하는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사업(0.5조원), 주택 및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(태양광 등) 설비 보급(0.2조원)·금융(0.4조원) 지원 등

※ '21년 상반기 친환경자동차 반기 국내 최대 판매 달성 (자료 : 산자부)
 * '21.上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'19.上 대비 2배 이상 증가
 - ('19.上) 8.1% → ('20.上) 10.0% → ('21.上) 17.3%
 ※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內 친환경차 등록(93.4만대) 비중은 '16년 1.1%에서 '21.6월말 기준 4.0%로 약 4배 증가

<붙임>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8월호(배포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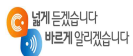
참고

8월호 주요재정이슈 요약

※ 기고문을 자체 요약한 자료이며, 전체본은 「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」(붙임에 게재)

① Post 코로나 시대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원격교육 발전방향 (변태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서비스본부장)

- (코로나19 대응 원격교육)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위기 속에서도 중단없는 교육을 지원, 미래교육 방향으로 원격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
 - *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원격수업 도입 시작('20.4.9~), 원격교육은 534만 명의 초·중·고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였음
- (한계점) 원격수업의 질 제고 필요, 체계적·통합적 플랫폼 부재
- (전망)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초·중·고, 대학, 평생학습 교육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온·오프라인 융합교육은 활성화 될 것
- (시사점) 코로나19 대응 경험은 교육 생태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, Post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전환 대응 필요
- ① (맞춤형 교육)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학습 현황 및 학습 패턴 분석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 지원 필요
- ② (통합플랫폼) 공공과 민간에 분산되어 있는 자원을 통합*하여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 필요
 - * HRD-Net, 국가인재개발플랫폼, 지자체별 평생교육 플랫폼(다모아) 등 공공 플랫폼과 우수한 에듀테크 기술 및 교육 콘텐츠를 보유한 민간 플랫폼 간의 연계
- ※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(KERIS)은 초·중·고 원격교육 기반 통합플랫폼으로서 K-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추진 중
- ③ (평생교육 지원) AI·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초·중·고·대학, 직업훈련, 취미교양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최적의 학습 경로 설계 지원 필요
- ④ (디지털 활용 역량) 가정의 낮은 디지털 접근성*을 고려, 학교 이외의 환경에서도 디지털 기기 활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 지원 필요
 - * 한국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 지수(OECD PISA 2018) : (학교) 6.345(OECD 평균 6.277) (가정) 7.645(OECD 평균 8.169)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

② 탄소중립 및 기후환경에 대응한 주요국 재정동향 및 시사점 (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정책실장)

- (탄소중립 현황)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탄소중립이 글로벌 아젠다로 대두
 - * 파리협약(15년) 이후 196개국에서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수립→'21.1월부터 이행
- 탄소중립 정책이 중장기 경기부양정책의 일환으로도 추진 (유럽 그린딜·우리나라 그린뉴딜 등)
-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규제 강화가 新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
- (글로벌동향) 탄소중립 관련 재정투자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원조달계획 마련 및 녹색예산제 도입에 집중
 - * 탄소중립 달성 위한 재정투자 규모: 매년 GDP 대비 0.5~4.5%(OECD 등 추정)
- ❶ (재원조달) 각국은 탄소중립 관련 민간 투자를 유도하면서, 탄소배출에 대한 비용부담 강화 등 재원마련 노력도 병행
 - (EU) 추가재원 마련을 위해 탄소세 도입·배출권거래제 확대 등 탄소가격을 강화하고 공동기금(EU구조기금) 조성
 - * 그린딜 재원(1조 유로) : EU 예산(5,030억), 유럽투자은행 등 금융기관(2,790억), 공동기금조성(1,140억), 배출권거래제(250억) 등
 - (영국) 탄소중립 분야의 민간투자가 상대적으로 충분하여 추가적 재정지출 소요가 크지 않은 수준 → 영국 정부는 기존 에너지세제(유류세 등)를 통해 재원을 충당하도록 노력 중
- ❷ (녹색예산제) 환경영향평가·탄소배출평가 등 '녹색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제도'로, OECD 국가(35개국) 중 14개국이 도입중
 - 특히, 프랑스 등은 기후변화대응 관련 예산항목을 별도 분류하는 '환경인지예산'을 도입하여, 기후변화 정책의 투명성 도모
 - * 전체 재정지출 중 기후변화대응과 관련 있는 지출이 무엇인지 국민이 쉽게 파악가능
- ⇒ (시사점) 탄소중립 관련 재원조달계획 마련 및 녹색예산제 도입 등 탄소중립 관련 투자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

③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R&D 투자전략 및 시사점 (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략연구소장)

- (주요국 동향) 감염병 등 글로벌 리스크 우려와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해 R&D 투자 확대중

< 주요국의 R&D 투자전략 >

미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예산) '21년 R&D 예산은 전년대비 0.9% 증가한 1,655억 달러(약 180조원) · (핵심분야) AI, 양자컴퓨팅, 첨단에너지, 로봇, 바이오 등 10대 첨단기술 분야 · (코로나 관련) 백신개발 등을 위해 '20년 긴급 R&D 자금 투입(약 10조원)
일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예산) '21년 과학기술 예산 요구액은 전년대비 11.4% 증가한 5.9조엔(약 62조원) · (핵심분야) 혁신역량 강화, 교육 및 인재육성, 원천연구 강화 등 3대 핵심분야 · (코로나 관련) 치료제·백신, 진단기술 개발 등 총 57.6조엔(약 607조원) 투입
유럽 연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예산) 향후 7년간 지난 7년 대비 24% 증가한 총 969억 유로(약 131.6조원) 투입 · (핵심분야) 우수과학, 글로벌 도전과제 및 산업경쟁력, 혁신적 유럽 등 3개 핵심영역 · (코로나 관련) 코로나 대응 기술개발 및 보건시스템 복구 등에 1.3조원 지원
중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예산) 향후 5년간 R&D 투자를 매년 7%이상 확대('25년 GDP비 2.8% 목표) · (핵심분야) 7대 선도기술(AI, 양자정보, 반도체, 뇌과학, 바이오, 임상의학, 우주 등) 및 8대 전략적 신흥산업(신소재, 로봇, 스마트카, 첨단의료, 농업기계 등) 지정

- (시사점) 우리정부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적 R&D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, R&D 투자와 관련하여 4개 사항을 권고
- ① 치료제·백신 개발을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고,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바이오헬스, 미래차, 시스템반도체 등 3대 핵심산업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 집중 지원 필요
- ②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의 국가생존을 위한 '기술주권 확립'을 위해, 소부장과 같이 우리 산업의 목을 누르고 있는 'Choke-hold 기술'의 원천기술 국산화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
- ③ 감염병, 미세먼지, 기후변화, 고령화 등 주요 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R&D 혁신이 필요하며, 특히 탄소중립사회 구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관련 혁신기술에 집중 투자 필요
- ④ 국가R&D 성과확산 촉진을 위해 기획단계부터 민간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사업화단계의 재정지원 필요

④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와 주요내용 (김위정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)

- ① (추진현황) 관계부처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·조율을 거쳐 손실보상 제도와 방안 마련* + '22년 2차 추경으로 1조원 반영**
- * 「소상공인 지원법」 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(7.1일) → 공포(7.7일) → 시행(10.8일)
 ** 추가적인 소요 발생시에도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하여 방역 손실을 차질없이 보상
-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고, 향후 유사 감염병 사례 발생시 손실보상의 객관성·형평성·예측가능성 제고
- ② (추진내용) 「소상공인 지원법」 개정법률 공포일(21.7.7일) 이후의 집합금지·영업제한 조치 대상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
- (지원대상)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이 기본 대상
 -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 일부 소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각지대 최소화
 - (지원내용) 개정법률 공포일 이후 방역조치(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 시간제한)에 따라 발생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*
 - * 조치의 수준,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,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 - (지급절차) 통합관리시스템(온라인) 또는 지자체(오프라인)에 신청 (소상공인) → 심사(중기부) → 심의(손실보상 심의위원회) → 지급
 - 기존 행정자료(카드매출 등)를 최대한 활용(국세청 등과 행방연결) 하여 소상공인의 증빙자료 부담 최소화 및 보상금 신속 산정
 - (지급시기) 금년 10월말부터 지급 개시
 -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개최(10.8일, 법 시행일) → 산정기준 등 고시(10월 중) 및 신청·접수·지급 개시(10월 말)
- ③ (중장기 추진방안) 충분한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①정부 손실보상, ②자조적 공제, ③민간보험 등 중층적 피해지원 시스템 도입·검토

⑤ 「국민공감예산」 편성을 위한 대국민 소통 강화 방안 (권기중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장)

□ 국민참여 방식의 다변화 시도

- 온라인 설문조사, 댓글토론 등 재정정책 관련 의견수렴 실시
 - (대국민 설문조사) '22년도 예산편성방향, 재정건전성, 재정준칙, 재정분권 등에 관한 오픈형 설문조사 실시
 - (1/2차 온라인 댓글토론) '22년도 예산편성 6가지 중점과제 및 중기투자방향, 지출효율화 과제에 대한 댓글토론 실시
 - * 예산편성 과제 중 특히 청년일자리 지원강화,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, 혁신적 교육훈련 지원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구축, 조부모 돌봄바다교육바나임지원 등 다양한 의견 개진
- (11개 분야별 예산협의회) 내년도 예산투자 우선순위, ②지출구조조정, ③전달체계개선 등에 관한 의견 및 건의사항 청취

<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 >

1	국방	①군 장비의 ICT 정예화 ②민군 기술협력 강화 ③장병급식 등 복지 증진
2	일자리·고용	①양질의 민간·공공 일자리 창출 ②직업훈련 체계 개편 ③전국민 고용안전망 확충 ④맞춤형 고용노동서비스 제공
3	사회복지	①취약계층 기본 생활 보장 ②빈곤층 추락 방지 지원 ③저출산 완화·고령사회 대응 ④안전한 돌봄체계 구축
4	문화체육·관광	①문화·관광·스포츠 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②K-한류 글로벌화 선도 ③문화복지 확대
5	농림·해양·산림	①농어촌 탄소중립 허브화 ②농어업 디지털전환 ③농어촌 재생뉴딜 등 생활인프라 개선 ④농어촌 경영의 안전·포용성 강화
6	R&D·혁신산업	①혁신적 기술개발 ②한국판뉴딜 2.0 성과 본격창출 ③미래 프론티어 기술 선제투자 ④과학기술 발전 생태계 활성화
7	환경	①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 ②물/대기/폐기물 등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 ③기후·환경 위기대응 등 안전망 고도화
8	소상공인·중소기업	①글로벌 혁신 벤처·스타트업 육성 ②중소기업 디지털·저탄소 경제 전환 강화 ③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강한 소상공인 육성 ④지역특화 중소기업 혁신
9	SOC	①국가균형발전 및 광역경제권 육성 ②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지원 ③국민안전·생활체감형 SOC 서비스 확충 ④디지털·저탄소 SOC 전환
10	고등교육	①새로 신설된 대학교육혁신 프로그램의 성공적 정착 및 성과 창출 ②고등교육기회의 지속 확대 ③대학의 자율 구조조정 뒷받침
11	보건·의료	①백신 글로벌 허브화 ②방역 등 공공인프라 고도화 ③ICT 기반 스마트 의료·건강관리시스템 구축 ④보건의료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

- (5개 권역별* 예산협의회) 국가·지방의 공통 재정현안** 및 각 시도별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 청취와 협력방안 논의

* 대구·경북, 광주·전라·제주, 부산·울산·경남, 대전·충청·세종, 수도권·강원
 **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, 2단계 재정분권, 지역균형 뉴딜, 생활 SOC, 광역철도 사업,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

6 지자체 자본보조사업 실행 개선방향 (이명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장)

- (현황) 지자체 자본보조사업('21년, 19.3조원)은 부처가 자금을 교부하는 시점의 '집행률'에 비해 지자체에서 '실집행률'은 낮은 66.3% 수준
 - 지난해 지자체가 이·불용한 예산 46조원 중 국가가 지원한 자본보조사업의 이월액이 11조원(국비 6.2+ 지방비매칭 4.5)을 차지
 - * 자본보조 이월액(실집행률): ('18) 4.5조원(69.6%), ('19) 5.7조원(68.6%), ('20) 6.2조원(66.3%)
- (분석) 지자체 자본보조금 예산은 e나라도움시스템('17년 도입)에 따라 실행률 집계 기반 구축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을 전면 점검하여, 만성적 부진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
 - ① 일부 부처 사업은 연차별 공정률(계획 → 설계 → 보상 → 인허가 → 공사 등)을 반영하지 않고, 예산을 배정하는 사례
 - ② 부처가 다수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시 지자체별 실행률 여력에 따라 교부액 규모를 연중 조정하는 체계 부족
 - ③ 그간 '집행률' 기준 중심의 재정사업 평가체제로 인해, 지자체에서의 실행률 여부를 파악할 유인 부재
 - ④ 지자체 입장에서 보조금을 충분히 미리 받아 놓고, 이를 이월하여 다년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는 관행이 반복
- (개선방안) 실행률 부진의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·집행·성과관리 등 예산 전주기별 개선방안 마련
 - ① (예산편성) 다년도 사업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해 연차별 예산 편성
 - ② (집행관리) 연내 실행률 실적에 점검하여 지자체간(실행률 부진 → 원할) 교부액 과부족을 탄력적으로 조정('22년 집행지침 개정)
 - ③ (성과평가) 보조사업 평가기준도 '집행률'에서 '실집행률'로 바꾸어 소관부처의 실행률 집중 점검 유도('21년 평가지침 既개정)
 - * 보조사업연장평가 : 사업관리의 적정성 평가시 실행률 실적에 따른 감점(최대3점) 부여
 - 재정사업자율평가 :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의 집행실적 평가기준을 실행률로 변경
 - ④ (인센티브) 균특회계 시도 포괄보조금 차등지원 인센티브 산정시 지자체별 실행률 제고 실적을 반영
 - * 균특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: 예산집행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차등

7 차세대 디브레인, 데이터 기반 행정과 AI정부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난다(윤정식 기획재정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장)

- (추진방향)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에 맞추어 '데이터 기반 행정 및 AI 정부' 플랫폼으로서 활용 가능한 차세대 dBrain* 구축 추진
 - * 사업기간: 2019.12월~2022.3월 / 사업비: 총 1,561억 원 / 삼성SDS 컨소시엄
- 다양한 데이터의 실시간 연계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'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 시스템' 구축 추진
 - ① 데이터(DATA): 디브레인 재정데이터에 더하여 사회경제지표, 행정지표, 민간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
 - ② 연계(Networking): 다른 시스템이 생성·보유한 데이터를 실시간 연계·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확대
 - * 현재 48개 시스템과의 연계를 807개까지 확대
 - ③ 인공지능(AI):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분석·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 적용방안 모색
- (정책상황 관리) '데이터 기반 정책상황 관리시스템'을 통해 정책상황 통합 모니터링, 주요 정책상황 실시간 집중관리 및 진단·예측 추진
 - * KORAH(S(KOrea Risk Assessment and Horizon Scanning))
- 데이터 기반 지표모니터링: 정책지표 통합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요인 포착 및 점검, 선제적 대응시스템 구축
-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판: 인구, 일자리, 지역민생, 대외변동성에 대한 시각화된 정책상황판 구축, 주요 정책지표 집중 관리
- AI 기반 정책 진단·전망 : 연계·축적된 데이터를 AI 기술을 활용·분석하여 정책지표 현황의 진단·예측을 통한 정책결정 지원 모색
- (데이터 분석 플랫폼) 데이터 기반 행정이 가능하도록 차세대 dBrain에 AI기반 '데이터 분석 플랫폼' 구축
 - * KODAS(KOrea Data Analysis Service)
- 재정데이터에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고, 축적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도록 AI 데이터 분석 툴 및 데이터 분석 교육 지원
- (기대효과)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, 국민의 삶과 밀접한 데이터의 실시간 관리를 통한 효과적인 정책결정으로 국가경쟁력 제고
 - ※ '22. 1월 차세대 dBrain 시스템 전면 개통 예정